

##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서홍관



필자의 어린 시절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사법고시 합격이 많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아버지가 장기간 실업자 이셨던 지난해 우리 형제들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둘째 형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의사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둘째 형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이다.

지금 서민들의 그 꿈이 흔들리고 있다. 둘째 형이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법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우선 법대에 들어가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로스쿨에 들어가야 하는데 로스쿨은 3년에 학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당시 대학 입학금부터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둘째 형이라면 법관의 길을 조용히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가 선진화한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도리어 이런 측면에서 후진

체 사건은 많은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응시 조건과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까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경우는 예외라 하더라도 아무리 공정하게 이 제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경쟁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것이다.

전문가를 우대해서 뽑는다고 하면서 학위를 강조하는데 대학 입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십여 년을 돈을 벌기는커녕 억대의 돈을 써야 하는데 학과 학과 학과로는 그 기회를 바라고 장기간 투자를 서민들이 할 수 있겠는가? 당장 낮은 급여의 일자리라도 얻어서 푼돈이라도 벌어야 하는

방학 동안에 수백만 원씩 들여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국제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들 앞에 서면 자기의 온갖 다양한 국제경험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골에서 책만 읽다가 올라온 죄 없고 눈 맑은 청소년들은 빙약한 자기 경험 때문에 면접서류에 '글로벌 시대에 부적합한 아이'로 분류가 되어 불합격의 쓴 잔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의 특별교육기금을 통해 폭넓은 장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도 능력만 있으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줘야 한다. 만약 로스쿨이 꼭 필요한 제도라면 로스쿨의 30% 정도는 전액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오로지 공부만 잘해도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가난한 서민의 자녀도 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나라 특권층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특권층이 아닌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가 밝고 바람직한 사회이다.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그들만을 위한 선진화가 되지 않도록 특별 제도를 폐지하거나 극히 제한하여 더 이상 특권층만을 위한 선진화방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가정의학 전문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특권층 아닌 당신의 미래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달 소위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30%를民間 전문가 가운데서 뽑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시험 방식도 현행 필기시험 위주의 고시가 아닌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학과를 가리도록 하는데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분야 경력을 우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뽑는 채용 방식이 '가진 자에게 절대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유명한 장관 딸의 외교부 특

서민들에게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별한 '당신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이 자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경쟁이 대학입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던 70년대에는 오로지 입학시험 하나로 학과를 결정했다. 그런데 지금은 입학사정제가 도입되고 대학마다 다양한 입학전형을 도입하고 있다. 입학 사정 방식을 다양화할수록 서민들의 자녀는 절대로 불리해진다.

강남의 '있는 집' 자녀들은 '스페'를 쌓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설부터 외국에 나가서 일년 넘게 어학연수를 하기도 하고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김현숙



42세 주부 박씨는 6개월 전부터 아침에 손이 붓고 아팠다. 곧 나아지리니 하고 소염제만 먹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진단 후에도 관절약이 부작용이 많다는 주위의 말만 믿고 수개월간 치료를 미루다 최근 손목뼈가 많이 손상되고 굳어졌다는 말에 후회가 막심하다.

흔히 관절염 하면 골관절염을 떠올린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인지도가 낮은 것도 이유지만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 활막에 생긴 염증은 관절을 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맥경화, 골다공증 등의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 현재 몇 번의 치료 또는 복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은 없다. 하지만, 가능한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약물 및 운동 요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무리가 없고 적은 수 이지만 완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기본적인 생활 고정, 운동 요법과 함께 약물 치료를 우선

## 기고

송광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북구가 지역주민과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이 제도는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세계 최초로 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곳은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이이다. 북구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제정한 2006년보다 2년이나 앞섰다.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대략 14단계

잘 통하고 오래를 앓아는 것은 양방향의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구성을 이끌어 가는데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느냐다. 아무리 주민을 위한 것이라도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소통부족은 오해와 불신을 낳는다.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막상과 잡음이 생긴다. 장시간 지속되다 보면 갈등이 커지고 충돌로 이어진다. 특히 진정

## 지역발전 견인하는 '소통 행정'

의 과정을 거친다. 동별지역회의 의견 수렴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 예산을 확정한다. 구심체는 26개 동(洞)에서 3명씩 선정된 주민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다.

이들은 6월부터 예산이 확정되는 11월까지 합숙토론회까지 해가며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동안 제기된 주민 의견 736건 중 502건이 반영될 만큼 반영률도 높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과 자치단체를 소통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톤실하게 하는 제도로 정착됐다.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소통이다.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이해가 상충 될수록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자치시대 행정에서도 소통은 단체장이 추구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이다.

더욱이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치료 결과가 더욱 좋고 학습증도 거의 없다. 전문의의 상담 하에 효과적인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 등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완치에 가까워질 수 있는 큰 첫 걸음이다.

<조선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성이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진정성이다. 또 소통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해야 한다. 어정쩡한 소통은 후유증만 생긴다. 공무원과 지역주민, 단체장과 조직 간 소통도 마찬가지다.

진정성과 분명한 태도에서 신뢰가 쌓이고 갈등을 녹이게 된다. 즉 흥미로운 일시적인 이벤트가 재미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마저 잡아낼 수는 없다. 행정의 소통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북구의 지역리더가 참여하는 365오피니언 그룹과 주부명예기자제, 동네한바퀴주부순찰단이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제와 함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국가나 행정, 기업, 개인 모두가 맞춤형 소통방식을 선택해서 변화의 노력을 한다면 상생발전의 길은 열린다.

2300년 전 장자강이 강조했던 '소통'의 중요성은 21세기에서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소통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북구청장>

## 타이어 공기압 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 했으면

최근에 우연히 타이어의 공기압을 측정해 주는 주유소나 정비소마다 공기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이용하는 한 카센터에 갔더니 적정 공기압을 50psi라고 말했다. 그런데 다른데서는 40이면 적당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데서는 원래 50이 맞지만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공기가 너무 빙글빙글해 안 좋으니 적절히 공기의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까지 말했다.

그래서 처음 차를 구입한 승용차 판매업

체에 전화를 걸어 승용차 타이어의 실제 규정 공기압을 물어봤더니 30psi이었다.

인터넷을 뛰져보니 타이어의 공기압은 규정보다 10psi만 차이 나도 굽어브에서 전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안전성을 감안해 미국에서는 신차에 의무적으로 공기압 자동측정기를 붙이도록 해놨다고 한다. 우리도 이것을 의무화시키면 정비업소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듯하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 시설

## 호남고속철 영남에 10년 이상 뒤쳐진다니

또 그 지긋지긋한 '호남 소외'인가. 호남지역 고속철도망이 영남보다 최대 10년 이상 뒤쳐질 것이라고 하니 참으로 암울할 뿐이다. 호남고속철도는 1단계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데 반해 경부고속철도는 2단계 공사가 오는 11월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우리는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호남고속철의 공정과 비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호남고속철에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할 예산을 경부고속철에 몰아주고 있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 사업비를 보면 확연하다. 지난 4년간 호남고속철에 투자된 사업비는 전

제 10조4901억원의 4.22%(4428억원)밖에 안 된다. 이같은 '꼼꼼 투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정부 예산이 우선 투자됐기 때문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혔다.

호남고속철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조3003억원씩 꾸준히 배정돼야

만 예정대로 완공될 수 있다고 하는 데, 지금까지 MB정부 행태로 보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부고속철은 2014년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에 나서는 반면 호남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 적어도 10년 가까이 뒤쳐진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지역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호남은 지역 출신 인사가 장·차관 등 정부 요직에 절실히 배제되면서 좌절감에 빠져 있다. 호남고속철의 초기 완공과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통망은 대통령 공약사업마저 흐지부지되고, 빚고을산단 조성 등이 투자 순위에 밀려 '차별'을 실감하고 있다.

지역적 차별은 결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정부 예산이 우선 투자됐기 때문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혔다.

호남고속철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조3003억원씩 꾸준히 배정돼야

'대출한도 제한 대학' 재학생 피해 없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곳을 발표했다.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70%인 제한대출그룹에는 4년제 대학 13곳을 포함해 전문대 11곳 등 24개 대학이, 등록금의 30%인 최소대출그룹에는 4년제 2곳, 전문대 4곳 등 6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다. 이 가운데 광신대, 남부대, 초당대, 한려대 등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4곳이 제한대출 대학으로 지정돼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상된다.

정부가 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공개한 것은 대학 구조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2015년이면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한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 전체대학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재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따라서 정원에도 미달하는 한계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한 층면이 있다.

하지만, 수시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실대학과 그들을 방지한 정부가 절대 할 책임을 아무런 죄 없는 재학생들에게 전가한 끝이기 때문이다.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도 부실대학 출신이라 꼬리표 때문에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선정 기준도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학사관리 등 6개의 기준이 지나치게 지방대학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해당 대학들은 기준이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부실대학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선망한 재학생의 피해를 줄일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재학생의 전학 허용 등 구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부실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세심한 퇴출 정책을 짜야 한다.

하지만, 수시 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퇴출 정책을 짜야 한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은 비타민 A, 칼슘 정도라고 하니 쌀로 배를 채운 조상들이 이해가 간다.

요즘엔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지난 해 1인당 쌀 소비량은 74kg으로 지난 80년 132.4kg의 절반 가까이 감격된다.

도로 쌀이 훌대를 받고 있다.

쌀 재고량은 10월 말 현재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149만t으로 적정량 72만t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햅쌀이 나오면 쌀값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햅쌀 가운데 납는 물량을 전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지만, 농민 반응은 냉랭하다. 쌀을 사서 쓰다듬는 '미(米)'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북 쌀 지원이라도 재개하라고 우려성이다.

근본적인 쌀 소비대책은 없는 걸까. '밥통'이 그리워지는 아침이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

## 無等鼓

은 양질의 탄수화물 끓어리이면서도 빵과 같은 밀가루 음식에 비해 배 이상 단백수가 높은 식품이다.

쌀에 없는 것은 비타민 A, 칼슘 정도라고 하니 쌀로 배를 채운 조상들이 이해가 간다.

요즘엔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지난 해 1인당 쌀 소비량은 74kg